

# 교수 퇴출의 시대

## .. ‘철밥통’ 깨지나

글 | 김희원 \_ 한국일보 기자 hee@hk.co.kr

**최** 근 연구실적 미비 등의 이유로 교수의 신분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수 퇴출 파장의 진원지는 카이스트(KAIST)다. KAIST는 지난해 영년직(정년보장)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가운데 15명(43%)을 탈락시킨 데 이어 얼마 전 재임용 심사에서 25명 중 24%에 해당하는 6명을 탈락시켰다. 탈락자는 정교수 3명, 부교수 2명, 조교수 1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만 KAIST에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다른 대학에 교수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탈락자 가운데에는 ‘사이언스’ 등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KAIST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준 생명과학과 김태국 교수도 포함돼 있다. 또한 나머지 재임용된 교수 19명 가운데 2명은 계약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 사실상 ‘경고’를 주었다.

지난해 영년직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의 경우는 부교수, 정교수 승진을 거친 상태라 하더라도 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재임용 탈락자들은 재임용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KAIST 교수신분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셈이다.

카이스트에 이어 연세대는 20명의 재임용 심사대상 교수 가운데 5명을 탈락시켰다. 탈락 이유는 강의시간 미달, 연구실적 미비 등이다. 성균관대는 33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재임용 심사를 벌였으며, 이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명의 교수가 자동

탈락됐다. 이 5명의 교수는 공대 2명, 의대 3명으로 연구성과가 미비해 재임용 탈락이 확실시되자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재임용을 신청한 계약직 교수 75명 가운데 사회과학대학 교수 1명을 탈락시켰다.

이밖에 한양대는 전공별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수 등 재임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8명의 교수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업적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경희대는 재임용 신청자 70명 중 2명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 대학 경쟁력을 높여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수 퇴출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다. 그 동안 “일단 정교수가 되고 나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교수 철밥통’의 관행이 일부(특히 나이든)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강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년직 심사와 재임용 심사를 요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교수만 제대로 선별하는 절차로 삼는다면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강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사실상 외국의 톱 클래스 대학들의 경우 엄격한 정년 심사와 잦은 이직은 아무런 기사가 되지 못하는 일상적인 일이다. 교수들은 공공연히 “하버드 대학의 경우 자기 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테뉴어(정년보장)를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미국 내 전 대학을 통틀어 뛰어난 성과를 보인 교수들을 뽑아서 정년을 보장하고 영입해 온다는 뜻이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버티기’에만 성공하면 정년



보장 교수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교수경쟁 시스템이 세계 일류 대학을 만들었다는 인식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류로 통해도 국제 경쟁력을 따질 때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 나라 대학들도 최근 들어 부쩍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사과정을 더욱 경쟁적이고 엄격하게 개선하고 있다. 서울대는 현재 각 단과대학에 맡겨진 영년직 심사를 대학본부 차원에서 다시 심사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대는 인문계 6년차 정교수의 기준을 3년간 논문 2편에서 3편으로 높였고, 서강대는 질적 평가를 도입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했으며, 동국대는 지난해 2학기 교내 강의를 맡았던 교수 1천49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러한 학교측의 압박에 따라 '연차만 채우면 승진하고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리라는 예상이다.

### 경쟁인가, 낙인인가

하지만 파동으로까지 불리는 최근의 교수 퇴출에 대해 대학 내부에서의 진통은 적지 않다. KAIST 교수협의회는 서 총장에 질의서를 보내 항의의 뜻을 전했고, 일부 학교의 자의적인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가 소속된 학회가 나서서 집단 서명을 벌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나오는 문제는 '잘린' 교수들이 외국처럼 다른 대학으로 옮겨

가가기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반발이다. 미국 톱클래스 대학들이야 몇 년 동안 정년보장 없이 강의하다가 경쟁에서 쳐져 다른 대학으로 옮겨 가거나, 또는 다른 대학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정년을 보장받고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 같은 일이 일반화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퇴출'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이직'이 아닌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KAIST 교수들이 지난해 영년직 심사 탈락과 올해 재임용 탈락을 놓고 서남표 KAIST총장과 학교 당국에 대해 터뜨린 가장 큰 불만도 바로 "교수 탈락 사실을 개혁의 성과로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해당 교수들이 인격 모독, 또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KAIST 교수협의회는 "언론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교수들을 집단 축출했다고 보도하는 마당에 어떤 대학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발했다. 사실상 어느 나라 대학이든 교수와 학생의 다양한 수준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KAIST에서 탈락된 교수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연구실적이 떨어질 뿐 제 역할을 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수들의 이직이 예상일처럼 여겨지는 나라와는 달리 이번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KAIST 교수들은 연구나 교육능력이 전혀 없는 교수처럼 낙인이 찍혀 다른 어느 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영년직 탈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서 총장에게 재발방지(인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홍보하지 말라)를 요구해 약속을 받았던 터라 이번 사실이 다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서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적지 않은 KAIST 교수들은 교수 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학교측이 서 총장의 개혁성과를 알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그 동안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전체 교수의 10% 정도가 자연스럽게 물갈이되는 등 연구실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교를 떠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AIST의 전체 교수 정원은 436명이고, 지금까지 면직과 명예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퇴출된 교수는 7명(1.2%)에 불과하나 사직한 교수 90명(16%) 중 상당수는 연구실적이 모자라 자연도태된 교수라는 것이다. 즉 KAIST 교수사회가 사실상 철밥통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 투명한 절차와 기준 필요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또 다른 내부 진통은 심사의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다. KAIST의 재임용에서 탈락한 6명의 교수 중 연구 진실성이 심각하게 결격된 김태국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 학내 교수들 사이에서는 "학부 교육에 진력한 교수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부 교육이나 연구논문 발표와 학회 발표 등을 모두 병행할 수 없었던 경우 연구보다는 학부 강의에 주력한 교수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다. 급기야 KAIST 교수협의회는 서 총장에 대한 질의서에서 "총장께서 학부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말을 믿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며 "평가기준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화여대 이성형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학회와 학생들의 항의서명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례다. 계약직 교수였던 이 씨는 중남미 정치학 전문가로 이화여대의 강의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계약이 만료돼 신규임용 심사를 받았던 그는 SCI급 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없다는 등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하지만 이 씨는 국내 학술지에는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씨가 소속된 정치학회와 비판사회학회는 이 씨 탈락에 대한 항의 서명을 벌이고 있으며 이화여대 학생들도 학교측에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씨의 경우는 계약직 교수로서 재임용 심사가 아니라 학교측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신규 임용 심사를 받았다가 탈락했다. 하지만 이화여대측이 이 씨를 재임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사직서를 받은 절차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KAIST와는 다른 경우지만 퇴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절차를 둘러싼 행정적·법적 분쟁이 일 것은 뻔한 일이다.

### 대학사회 전체가 함께 변해야

교수 퇴출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교수 경쟁력 강화라는 올바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 대학사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사실상 한 두 대학이 교수들을 퇴출시켜선 "해당 교수들만 억울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교수 시장의 유연성이 커져 교수들이 활발히 이직하고 경쟁할 경우에만 대학들이 인적 경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KAIST 서 총장은 엄격한 심사를 표방하면서 "교수 한 두 명만 예외적으로 탈락시킨다면 그들은 갈 곳이 없지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갈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대학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의지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을 채찍질할 수 도권은 각 대학에 맡겨져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면 그 판가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떠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학들이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되거나 희생양을 구제하는 등 상이한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의 여파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 강성근 전 교수의 경우에도 당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 처분을 내리자 서울대가 이를 다시 거부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교수 격변기를 맞아 함께 달라져야 할 또 다른 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인 셈이다. **SD**



글쓴이는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이래 한국일보에 재직하고 있다.